

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(2.3) 모두 말씀

- 그간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‘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’에 두고,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
 - 또한, 복지예산도 금년의 경우 총 예산대비 31.9%(123.4조)로서 역대정부 최고 수준으로 확충하였음

- 그러나 아직 복지체감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 - 이에 정부는 복지제도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, 복지재정의 중복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

- 이러한 상황 속에서,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을 자신들의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음
 - 특히,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에서 정한 중앙정부와의 협의·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,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
 -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람
 -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
 - 그리고 “사회보장의 신설·변경시 협의제도”를 엄격히 운영하여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임

- 또한,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, 정작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움

-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긴급 의결하였음
 -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에 상응하여 지원할 것이나,
 -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
 - 정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임
 -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,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임
 -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함
- 다음으로 오늘 안전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음
- 정부는 “앞아서 기다리는 복지”가 아니라 “찾아가는 복지”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할 것임
 - 우선 금년에는 읍면동 700개소를 복지허브로 전환하고,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
 -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확충 예정인 복지인력 6천명을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, 복지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높여 나갈 것임
 - 또한, “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 종합계획”을 처음 수립하여 노숙방지를 위한 “예방-지원-사회 복귀”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
-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는 “사회보장 컨트롤타워”로서 복지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, 복지재정의 효율화와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